



평등의 기반위에 다양한 능력을



이 철 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우리 교육의 현재

2004년 12월 7일 OECD는 '2003년도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2003)' 결과를 발표하였다. 12월 14일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가 수행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TIMSS 2003)' 결과를 발표하였다. 두 결과 모두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교사도 학부모도 아이들도 아니 한 국사회 전체가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 분석도 다양하고, 이에 대한 처방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고교 평준화와 통합교육의 효과라고 하고 있으며, 학습 동기가 낮음을 우려하여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의 교육력이 아니라 학부모가 사적으로 투여한 사교육의 효과가 크며, 최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순위가 전체 학생들의 순위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준화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OECD의 베르나르 위고니에 교육국 부국장은 한국 학생의 국제 경쟁력이 높게 나온 이유로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한 학교 한 교실에 모아놓고 가르치는 평준화 교육을 들었다. PISA 결과가 좋게 나오는 국가 대부분이 평준화를 추구하는 나라들이라는 게 OECD측 설명이며, 이번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핀란드의 경우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 장애·비장애 등을 가리지 않고 한 학교에 입학시키는 극단적 평준화 정책을 펴는 나라이다.

더하여, 학교 안의 학력차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학교간 격차는 교육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학생들이 수학에서 세계 3위를 기록했지만 수학에 대한 흥미 등은 하위권이라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을 보유

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습 동기는 낮은 데 학업성취는 높은 이상한 상태에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사회는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이다. 우리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학벌주의로 인해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학벌은 전근대적인 신분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학벌이 사회 권력과 연관되어 부와 권력을 독점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벌은 은연중에 모든 이들의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이나 인격 이전에 그가 가진 학벌로 모두를 판단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는 고용이나 인사 과정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혼인이나 교우 등 사적인 관계에서도 판단의 준거가 되고 있어서,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학벌을 획득하는 것이 성공인 상황에서 학부모와 청소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학벌 추구에 전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족은 최대한의 사교육비를 투자하며 이 과정에서 심지어는 해체를 마다하지 않는다. 하기에 대학교육의 기회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은 멈출 줄 모르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끝나는 것은 아니다.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대학체제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얻은 수능점수에 의해 대학과 학문을 배정받았기에 대학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재수를 선택하거나 편입을 준비한다. 다음

에는 취업을 위한 영어 공부나 고시 공부를 시작한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이미 교육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무엇보다 학벌의 가장 큰 문제는 차별을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승리한 소수가 아닌 대다수는 학력이테올로기로 인해 개인적인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간다. 상대적인 심리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이른바 이류·삼류대학에 다니는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이류·삼류 인간이라는 뼈아픈 정체의식에 평생 시달리게 된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나오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가지기 힘들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4년 11월 11일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결과 보도 자료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좋으며,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교육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학교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교들 사이에 학력격차가 존재할 것이며, 이는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격차이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라는 보고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 보고서의 지난 34년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신입생 분석결과를 보면 강남 8학군 지역은 전국 평균의 2.5배의 차이를 보이며, 이 같은 입학률 격차가 부모의 학력, 소득격차 분포율과 거의 일치해 고소득 직군 아버지의 자녀 입학률은 기타 그룹의 입학률보다 16배나 높게 나타났다. 차이는 대학 입학 후에도 이어져 서울 출신 학생의 입학 후

학점이 지방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라는 지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이 차별과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교육 투자가 많으며, 아이의 문화자본이 풍부하며, 학교교육활동에서의 성취가 높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서열이 상위인 대학에 진학하여 학벌을 획득한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이는 빈곤을 대물림하는 차별일 수밖에 없다.

통합을 지향하는 학교제도

모든 이들은 저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각기 다른 능력은 그 계발 과정과 발현시기가 다른 기본이다. 그러나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입시경쟁 교육은 이 다양한 가능성을 학력 또는 학업성취라는 하나의 잣대로 획일화한다. 능력은 오로지 학력으로 환원되고, 점수에 의한 서열로 귀결된다. 서열 세우기에서는 하나의 기준만이 존재하지 능력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열화의 기제인 학력이 교육기회의 차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는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라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재능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질 집단의 교육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학교자체를 분리하여 선택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학교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학교제도의 분리 선택 방식은 하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왜곡 문제,

낮은 사회계층의 교육 기회 박탈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기에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통합을 통한 교육과정의 선택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평준화된 통합학교의 교육성취가 높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그렇지 않다. 보통교육은 초·중등 12년으로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무상교육은 9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후기 중등교육단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는 이미 인문, 실업의 계열별 진로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능력의 차이를 제도화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숫자를 늘려온 특목고 등의 특별한 학교는 대학입시 명문고로 전락하여 교육적으로 실패한 채 보통교육의 틀을 위협하고 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사교육,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생 60%이상의 대학 진학, 특목고의 대학입시 종속을 통해 고등학교 복선체제가 사실은 대학입시라는 단선형체제에서 계층적인 차별의 기능만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의 고등학교 체제는 이미 실패한 체제이다. 중등 후기 과정이면서 고등교육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현실, 고등교육이면서 완성교육을 지향하지 못하고 대입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12월 22일에 발표한 전체 초·중·고 학생의 5%인 40만 명을 위한 수월성 교육 실시 계획은 영재학교 추가 설립, 영재교육원 신설, Tracking(계열화) 도입·조기졸업 등 공교육 체제 전반을 뒤흔들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대책의 목적이 '지식·정보화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일반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또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권력을 지향하며 성장하기 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조화로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과 국가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기회의 차등과 결과의 차별화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는 것은 소수의 5%의 승리를 위해 나머지 95%를 버리겠다는 데에 다름 아니다.

수월성 교육은 공교육 일반의 원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장애 아동에 대한 통합교육, 저소득층 자녀에 관한 기초적인 지원, 학습부진아동에 대한 보충학습의 기회 제공과 같은 차원이어야 한다. 제도로서의 공교육이 성, 종교, 출신 성분 등에 따른 교육기회에 차별을 두지 않듯이 지능, 문화, 장애 여부에 의한 차별 또한 온당하지 않다. 따라서 영재교육의 목표도 학생이 재능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두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반보편교육 우선의 원칙아래 특정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의 제도화를 전면 거부해오고 있다. 영재와 평범한 학생을 격리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학군제, 교육복지우선지구 등을 통하여 출신 사회계층과 능력이 다른 학생들의 통합을 추구한다. 이러한 혼재를 통하여 평범

한 학생들에게는 우수 집단과의 공존으로 인한 집단상승효과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우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기적, 소외적 성향과 사회부적응 태도를 예방하고 원만한 사회성을 습득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책임감과 봉사심을 가진 미래의 지도자로 양성한다는 이종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읽은 적이 있다.

이는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잘 보여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일반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또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권력을 지향하며 성장하기 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조화로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능력은 평등의 기반위에

우리 교육은 양적 기회는 확대하면서 동시에 그 기회를 차등화함으로써 장벽을 쌓고 있다. 대표적인 기제가 바로 학업 성취도로 측정

되는 학력이라는 준거이다. 사회는 이를 직업 구조와 연동시킴으로써 불평등이 개인의 학력 차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한다. 즉 학력수준이 높으면 고위직에 오르고 고임금을 받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것이 학력의 신화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따른 급별, 연령별 교육 목표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육적으로 유용한 학력차란 어떤 것인가 하는 정의도 없는 상태이다. 현재의 입시체제에서 학력은 본질적인 의미의 학력이 아니라 서열화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학력으로, 배우고 시험 치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학력이다. 또한 학력이 학문과 지적 발전이 아니라 서열화를 위한 변별 도구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서열을 위한 객관화된 평가의 문제는 이제 평가를 위해서 교육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평가될 수 있는 것만을 가르치는 본말전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암기하여 시험지가 요구하는 답을 맞추는 것이 최선의 교육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이나 다양한 능력이나 창의성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린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급속하게 지식이 진보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교육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방향은 학력이라는 잣대에 의한 격차를 드러내기 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계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하여, 현실적으로 학교간의 학력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를 반영하여 고교간에 집단적인 등급을 매겨 거주 지역을 차별하기 보다는 열악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분권과 통합의 정신이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공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적 문제이다. 학벌, 학연, 성적 등으로 학교교육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는 지식기반사회와 정반대 방향에 놓여 있다. 적어도 중등교육 단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복지라는 시각에서, 투자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공공성을 기초로 학교교육을 운영해야만 한다.

함께 살아가면서, 남과 다른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중하게 가꾸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재능을 계발하여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시급하다. 국가수준의 확실적인 서열화 평가로 인한 억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 자유로운 정신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바로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는 길이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 경쟁력은 소수의 승리감이 아니라 대다수의 가능성과 행복에 기초하여 높아지는 것이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학교, 소수만이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고 다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교육으로는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다양한 능력은 다양한 준거에 의해 계발되는 것이며, 이는 평등의 토양에서 비로소 아름답게 익어가는 열매이다. ■■

이철호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 범국민교육연대 연구위원, 한국교육정책연구회 발기인을 맡고 있으며, 현재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평준화 방안 모색”, “입시, 불평등의 제도화”, “교원 직제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다.